

'제2운창호법' 시행 첫날 경찰 준비 부족

'취소'→'정지'...옛 훈방수치 0.05% 미만은 입력 불가 "개정 내용 홍보만 치중...체계적 준비는 소홀" 지적도 경찰청 "단속PDA망 일부 오류 확인...현재는 정상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비싼 적발 기준이 경찰 전산시스템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개정 내용에 따라 단속을 벌였지만 전산망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단속 PDA 망 관리 상 문제가 있었고 현재는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25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중 비싼 적발 기준에 해당하는 단속시제 2건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입력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0시9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9%(운전면허 취소수치)인 상태로 차량을 몰던 최모(46)씨가 단속 경찰에 적발됐다.

최씨는 개정 내용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돼 강화된 기준 적용의 광주 지역 첫 사례가 됐다.

하지만 단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음주측정 결과와 1차 조사 내용을 폴리곤(PDA)을 통해 TCS에 전송했으나, 전산 상에는 최씨의 적발 사례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동 입력되고 있다.



25일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 IC 서창 방면 편도 5차선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 '훈방'에 해당했던 음주측정 수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같은날 오전 0시33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붙잡힌 최모(22)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운전면허 정지수치)였다.

지난 24일까지는 '훈방'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최씨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단속경찰관이 최씨의 음

주 측정 수치와 진술 내용을 TCS에 입력하면 '0.03%미만'으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전산에 입력되지 않고 있다.

통상 일선 경찰서 교통안전계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단속을 벌여 위반 내용을 적발하면 관련 내용을 TCS 전산에 입력한다.

이후 조사부서인 교통사고조사계는 전산 상 내용을 확인한 뒤 위반자를 불러 정확한 위반 내용과 경위 등을 파악한다.

비싼 음주운전 적발기준이 전산

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날 일선 경찰서에서는 혼란이 빚어졌다.

한 단속경찰관은 "PDA를 통해 다른 적발 사례 등은 정상 입력되고 있다"면서 "이날 자정에 맞춰 현장에서는 엄격하게 단속하면서 전산 망 운용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른 경찰관은 "전산 입력 문제로 단속부서와 조사부서 모두 혼선을 겪고 있다"며 "경찰이 개정 내용에 따른 음주운전 근절 홍보활동은 펼치면서 내부 준비는 안 됐다"는 사실을 국민이 납득할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경찰관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PDA와 연동되는 통신망을 위탁 관리하는 통신사 2곳 중 1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비싼 적발 기준은 전날 밤 10시에 TCS 등에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날 오전동안 일부 지역에서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해 현재는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9%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정도도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신봉우 기자

여수서 시내버스 전봇대 충돌...10명 경상

25일 오전 9시52분께 여수시 돌산읍 편도 1차선 도로에서 A(31)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승객 9명 등 총 10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시내버스에는 승객 10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스가 좁은 도로에서 맞은 편 차량을 피하다 비취가 받고달에 빠지면서 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여자친구 속여 수백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접근, 교제를 빌미로 속여 금품을 가로챈 20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정신지체 장애인 여자친구의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절도)로 장모(2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1월21일 광주 북구 한 은행 자동현금인출기에서 여자친구 A(26·여)씨의 통장에서 현금 60만 원을 출금하는 등 지난 4월11일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현금 932만 원을 무단 인출해 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해 11월 교회에서 장씨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에게 고의로 접근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정신지체 3급인 A씨가 자신 명의의 은행 통장을 삼촌에게 맡겨 관리한다는 사실을 안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A씨에게 "왜 네가 수년간 아르바이트를 해 벌어들인 돈을 삼촌이 관리하느냐. 통장과 카드를 재발급 받으면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피어내 계좌번호·인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A씨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았으며, A씨가 출금할 때 결혼질로 확인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이용해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했다.

범행 직후 연락을 끊었던 장씨는 지난 4월 초 계좌 출금 내역을 수상히 여긴 A씨 삼촌이 통장을 재발급 받아 더이상 출금이 되지 않자 A씨를 다시 찾아냈다.

장씨는 A씨를 설득해 체크카드를 건네받았으며, 지난 4월11일 현금 63만 원을 추가로 인출했다.

A씨 삼촌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은행 내 CCTV영상을 토대로 장씨를 검거했다.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장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로 모두 쓴 것으로 전해졌다.

고향 선배 집서 금고 훔친 2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25일 선배 집에 몰래 들어가 금고를 가져간 혐의(절도)로 최모(2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30분 광주 북구 선배 집에 침입해 2200만 원이 든 소형 금고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달 대출 중개사업을 하는 고향 선배에게 동업을 제안받고 광주를 찾았으며, 당시 집과 금고 비밀번호를 알게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에 "동업을 거절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빚을 갚으려고 선배 집에 몰래 들어가 금고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만취상태서 지인에 흥기 휘두른 4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25일 동거하던 지인에게 흥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56분 광주 북구 모 아파트에서 A(49)씨에게 흥기를 휘둘러 신체 일부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김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술병·흥기를 차례로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한 주거지와 직업이 없는 김씨는 지난해 8월 지역 한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친해진 뒤 A씨 집에서 동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와 A씨가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치료를 도울 방침이다.

조인호 기자

민·관, 여수산단 대기 측정치 기록 위반업체 6~7월 현장조사

전남도, 5개사 11개 사업장

여수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6~7월 대기 측정치 기록 위반 5개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지난 24일 여수시청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대기 측정치 기록 위반 배출업체 민관 합동 조사와 여수산단 주변 환경상태 조사,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공개 방안, 여수산단 주변 주민 건강영향 조사 및 유해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대기 자가 측정치 기록 위반 배출업체에 대해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차로 정부합동기관의 합동 조사를 요청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7월 위반 5개사 11개 사업장에 대해 2개 반을 투입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사업장 위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며,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오염도 검사를 하게 된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공개 방안에 대해선 여수산단 내 모든 사업장의 환경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 10인 이상의 주민이 관할 기관인 전남도와 여수시

에 공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전남도와 여수시는 기업체와 '환경오염시설의 자발적 공개협약'을 체결, 7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여수국가산단 주변 환경상태 조사와 여수국가산단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위생성 평가에 대해선 주변 지역 법위를 10km 이내로 한정 설정하되,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항목별로 조정하기로 했다.

세부 조사 방법·대상·범위·절차·내용 등은 전국 유사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도는 지난 3차 회의 시 위원회

에서 요청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수질 관리체계와 개별 배출업소의 2018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능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위원회 활동과 별개로 여수 국가산단 환경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대상 2023년까지 확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관리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환경관리 전담기구 설치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업장 특별감독, ▲대기,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장 전수조사 등이다.

제5차 회의는 오는 7월 12일 오전 10시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